

미·중 세력 경쟁 속의 한국외교 재성찰: 전략적 딜레마 극복을 위한 비판적 논의

은용수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21세기 동아시아지역의 국제정치질서는 흔히 미국과 중국의 대결구도로 묘사되며, 여기서 한국은 이른바 “전략적 딜레마”라는 프레임 ‘내부’에서 외교적 고민을 해야만 하는 ‘객체’로 여겨지곤 한다. 본고는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한국의 외교적 목표와 실행에 관한 대안적 입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국제정치학의 비판이론을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그것이 ‘실행적’ 차원에서 어떤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한국외교의 맥락에서 고찰한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전략적 딜레마”가 기존의 냉전적 질서 속에서 도출된 질문과 언어의 재생산 및 확산으로 비롯된 ‘담론적’ 성격을 내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함으로써 한국외교가 좀 더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JPI정책포럼 세미나(2015.07.09) 발표자료

목 차

1. 비판이론(Critical Theory)이란?
2. 비판이론과 국제정치학 주류 이론
 - 가. 비판이론과 현실주의/자유주의
 - 나. 비판이론과 구성주의
3. 비판이론의 실천적 공헌과 함의: 한국외교정책에 관한 시사점
 - 가. “전략적 딜레마”의 비판이론적 ‘해체’와 ‘재구성’
 - 나. 비판이론적 “성찰”을 통한 ‘담론적 제약’의 해방과 새로운 질서의 모색
 - 다. 새로운 질서 형성에 관한 비판이론적 제언: “성찰”의 ‘보편적’ 실천
4. 맺음말

1. 비판이론(Critical Theory)이란?¹⁾

- 긴 역사적 흐름을 갖고 있는 비판이론을 사회과학 분야에 본격적으로 확립하고 확산시킨 주역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학파(Frankfurt School)라고 할 수 있음
- 프랑크푸르트학파는 불평등, 억압, 지배, 차별과 같은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는 사회구조와 메커니즘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음(Devetak 2005: 137-138). 즉 칸트의 비판철학,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와 궤를 같이 하면서 “사회변혁(social transformation)”에 필요한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사회억압을 일으키는 현존체제와 구조로부터 “해방(emancipation)”되는 것에 큰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함
-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이론은 1960년대 들어서 하버마스(Habermas), 아도르노(Adorno), 마르쿠제(Marcuse), 호르크하이머(Horkheimer) 등과 같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더욱 발전되었고, 이 가운데서도 특히 하버마스의 활동이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할 수 있음²⁾
- 1968년 처음 출판된 그의 책 『Erkenntnis und Interesse(Knowledge and Human Interests)』에서 하버마스는 실증주의의 ‘가치중립성’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실증주의 토대에서 생산된 경험적 지식 역시 결코 중립적일 수 없다고 주장함. 그는 또한 “의사소통행위론”을 통해 사회의 불균형적 권력이나 정보의 왜곡 및 은폐의 문제가 해결 혹은 제거되면 “이상적 담화상황”이 연출되어 결국 이성적으로 더 나은 주장(발언)만이 살아남게 되고 이에 대한 합의를 통해 진리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함³⁾
- 만약 실증주의에서 주장하듯 이론과 관측의 분리 및 이를 통한 ‘경험적’ 검증이 과학적 지식의 보장수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생산된 경험/분석적 지식 역시 ‘예측’과 그것을 통한 사회(자연)현상의 ‘통제’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가치중립적일 수 없으며 실증주의에서 말하는 객관주의는 성립될 수 없다고 설명함
- 프랑크푸르트학파 비판이론의 인식론은 연구자와 연구대상의 분리 ‘불’가능성을 전제한 상태에서 권력불균형이나 의사소통의 왜곡 및 정보의 은폐를 낳는 역사적 상황과 맥락, 그리고 사회구조가 무엇인지를 밝히며 그러한 문제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상태는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가치판단’을 이론의 핵심기능으로 규정함. 즉 이론은 중립적일 수 없으며 나아가 사회변혁의 도구로 활용되어야 하는 것

으로 인식함

2. 비판이론과 국제정치학 주류 이론

가. 비판이론과 현실주의/자유주의

- 국제정치학(IR)에서 비판이론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고 적용한 ‘초창기’의 대표적인 학자들로는 로버트 콕스(Robert Cox), 앤드류 링크레이터(Andrew Linklater), 리처드 애슐리(Richard Ashley), 마크 뉴펠드(Mark Neufeld), 마크 호프만(Mark Hoffman) 등을 꼽을 수 있음
- 국제질서를 논하면서 “이론은 언제나 누군가를 ‘위한’ 것이며 특정한 목적을 ‘위한’ 것이다(theory is always *for* someone and *for* some purpose)”라는 콕스의 발언은 ‘IR의 비판이론’이 갖는 인식론이 프랑크 푸르트학파의 그것과 다르지 않음을 잘 보여줌(Cox 1981: 128)
- 전통적 비판이론과 마찬가지로 IR의 비판이론가들 역시 이론(theory)과 이론가(theorist)는 분리될 수 없기때문에 가치중립적 지식이란 있을 수 없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IR 이론도 일정한 가치를 추구하며 나아가 서로 다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함
- 콕스는 여기서 두 가지 유형의 이론을 소개함: 하나는 그가 선호하는 비판이론이며 다른 하나는 “문제풀이형(problem-solving)” 이론으로 명명된 유형임
- 콕스에 의하면, “문제풀이형” 이론은 실증주의적 인식론과 방법론을 ‘선호’하며 나아가 현존하는 사회정치적 구조를 ‘정당화’하는 경향을 보임. 달리 말해 “문제풀이형” 이론은 현(現) 체제나 구조 ‘내(within)’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현존 질서의 ‘유지’ 혹은 ‘강화’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함(Cox 2007: 513)
- 월츠의 신현실주의나 코헤인의 신자유(제도)주의가 바로 “문제풀이형” 이론에 속하는 대표적인 IR 이론이라 할 수 있음. 이들은 모두 현존하는 국제정치적 질서와 속성(예컨대 무정부성과 힘의 정치 등)을 ‘주어진’ 현실 내지는 변하지 않는 ‘상수’로 여기고 그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적 주장(예컨대 정책 결정의 신중함, 힘의 증강 및 균형, 국제기구 및 제도의 확장 등)을 제안함

이들은 모두 현존하는
국제정치적 질서와
속성(예컨대
무정부성과 힘의
정치 등)을 ‘주어진’
현실 내지는 변하지
않는 ‘상수’로 여김

신현실주의자나**신자유주의자는****현재의 국제정치질서****자체를 문제 삼고****그것을****변형하려하기보다는****그 ‘내부’에서****그것과 ‘함께’****작동하도록 자신들의****이론을 위치시킴.****비록 질서의 내부적****문제해결은 가능할지****몰라도 그 질서 자체가****갖는 문제들, 그리고****‘새로운’ 질서에****대한 비판적 성찰은****외면되면서 결국****‘현’ 질서가****지속되는 결과로****이어질 수 있다고****비판이론은 지적함**

- 신현실주의자나 신자유주의자는 현재의 국제정치질서 자체를 문제 삼고 그것을 변형하려 하기보다는 그 ‘내부’에서 그것과 ‘함께’ 작동하도록 자신들의 이론을 위치시킴
- 신현실주의를 비판하면서도 복잡한 국제정치경제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운용되는 것을 용이하게(facilitate the smooth operation)”하는 것이 신자유제도주의의 목적이라는 코헤인의 발언은 “문제풀이형” 실증주의 이론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줌(Keohane 1984: 63)
- 이러한 접근을 통해 비록 질서의 내부적 문제해결은 가능할지 몰라도 그 질서 자체가 갖는 문제들, 그리고 ‘새로운’ 질서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외면되면서 결국 ‘현’ 질서가 지속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이론은 지적함
- “문제풀이형” 이론이 나아가 비록 가치중립을 강조하면서 연구자의 가치가 배제된 실증적 연구방법을 내부의 “문제풀이”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내세우지만, 역설적으로 그것은 현존 질서의 ‘재생산’이라는 ‘가치’가 내재된 이론이며 의도하지 않더라도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현 질서에 대한 “안정화 효과(stabilizing effect)”를 발휘하게 됨. 비판이론은 이것을 문제시하면서 이로부터 ‘해방’될 것을 주장함
- 한편, 국제정치연구가 “피할 수 없이 규범가치적이다(unavoidably normative)”라는 마크 느펠드의 발언은 IR 비판이론의 지향점이 무엇이며 실증주의와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줌(Neufeld 1995: 108)
- 이러한 맥락에서 비판이론은 연구자들은 전 지구적 불평등, 권력과 정보의 왜곡, 국제기구의 부조리, 국가의 독재 및 부도덕한 전쟁, 국제사회의 ‘정치적’ 개입, 국가 주권 및 영토의 ‘배타성,’ 지역 및 국제차원에서의 패권경쟁 등등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것을 야기하는 현실서과 현재의 권력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관한 역사적 분석에 많은 관심/가치를 부여함
- 나아가 이러한 ‘가치 내재적’ 연구는 필연적이면서 동시에 매우 타당한 “과학적”인 연구라고 믿음
- 요컨대 IR 비판이론은, 실증적 세계관에 기반을 둔 신현실주의나 신자유주의의 주장과 달리 국제체제의 무정부성이나 국가의 합리성은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도 아니며 불변의 고정된 것도 아니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정치의 현 질서를 “부자연스럽게(denaturalizing)” 만들면서 결

국 이를 통해 현 질서의 ‘내부’가 아닌 질서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해 줌

- 현 질서에 대한 문제의식은 새로운 질서의 모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비판이론가들에게 “세상을 아는 것과 그것을 변형하는 것은 불가분 (knowing the world and changing the world are inseparable)”한 것, 즉 동일한 것으로 이해됨(Jackson 2011: 160)

나. 비판이론과 구성주의

- 현 질서의 변형과 해방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IR 비판이론은 자연스럽 게 권력(power)의 문제에 천착함. 물론 기존의 신현실주의나 신자유주 와 같은 “문제풀이형” IR 이론들 역시 궁극적으로는 권력에 관한 이론 이지만 비판이론은 허칭스(Hutchings)가 지적하듯 다음과 같은 전제에 기 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과 확연히 구별됨: “IR 이론은 정치(권력) 에 관한 것이지만 동시에 ‘스스로’ 정치적(itself political)이다”(Hutchings 1999: 69)
- 이는 IR 비판이론의 인식론뿐만 아니라 그것의 ‘존재론’이 어떤 특징을 갖고있는지 잘 보여주는 발언이기도 함: IR이 “스스로 정치적이다”라 는 말은 IR 이론과 이론가가 국제정치의 ‘현실’과 떼어 수 없는 관계이며 동시에 그것을 ‘구성’하는 중요한 단위임을 명시적으로 표현한 것임
- 행위자의 언어, 관념, 개념, 주관적 이해를 구조와 질서의 형성에 중요 단위로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IR 비판이론의 존재론은 구성주의 의 그것과 잘 상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예를 들어 콕스와 싱클레어의 다음과 같은 발언이 이를 잘 보여줌: “국제정치의 구조는 행위자의 상호 주관적 이해의 산물(intersubjective products)”이며, 비록 “구조는 물리적 으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행위자인 인간이 마치 실제 존재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함”(Cox and Sinclair 1996: 138)
- 한편, 비판이론과 구성주의의 존재론적 측면에서의 유사성은 인식론으 로까지 이어지지 않음. 오히려 이론의 기능과 이론가의 역할에 대한 인 식의 차원에서 큰 차이를 보임
- 비판이론은 현 질서에 대한 문제제기, 도전, 나아가 그것의 변형을 추 구하고 이를 위해 사회역사적 조건에 대한 분석을 ‘성찰적’인 맥락에서 수행하지만, 주류의 구성주의는 가치 내재적 연구(즉 연구자의 가치판

현 질서에 대한
문제의식은 새로운
질서에 대한 모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비판이론가들에게
“세상을 아는 것과
그것을 변형하는 것은
동일한 것

**비판이론이 IR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물질적
역량으로써 이해되는
권력문제라기보다는
지식과 권력의
상호의존적 관계로서
발생하는 지식권력의
문제**

단)에 거부감을 보임

- 구성주의에는 매우 다양한 변주들이 있으며 여기에는 비판적 구성주의(critical constructivism) 역시 존재하지만, 주지하듯 구성주의 내에서 “주류”는 미국 학계의 구성주의, 특히 웬트(Wendt)류의 구성주의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 ‘주류 구성주의’는 국제정치의 현 질서나 체제의 “변형”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음
- 호프(Hopf)가 잘 설명했듯, 전통적인 주류의 구성주의자들은 ‘규범’에 관심을 두지만 그들의 연구가 “규범적 아젠다(normative agenda)”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혹은 그것에 의해 방향이 정해지는 것을 결코 용인하지 않음”(Hopf 1998: 183). 애들러(Adler) 역시 주류의 구성주의자들은 “해방이나 주변화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설명함(Adler 1997: 333). 이런 차원에서 이론적 “성찰”은 주류 구성주의의 관심 대상이 아님
- 비판이론가들은 바로 이 지점을 문제 삼음. 비록 전통적 구성주의는 국제정치에서 규범과 같은 관념적 요소가 중요하게 작동함을 ‘경험적’으로 보여주는데 성공했으나, 그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질문, 즉 국제정치에서 “어떤 규범이 더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윤리철학적 문제에는 침묵함으로써 결국 현 질서에 연계된 규범의 정당화 혹은 지속화에 공헌하는 데 일조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이 제기됨
- 비판이론이 IR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물질적 역량(material capabilities)으로써 이해되는 권력문제라기보다는 푸코(Foucault)가 오랜 기간 지적해왔던 지식과 권력의 상호의존적 관계로서 발생하는 지식권력(knowledge-power)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음. 비판이론은 이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써 이론적 “성찰(reflexivity)”을 강조함(Cox and Sinclair 1996; Hamati-Ataya 2014)
- 여기서 이론적 “성찰”이라 함은 연구질문이 도출되고 지식이 생산되는 역사적 시공간과 현 질서에 대한 자의식이면서 동시에 그 질서와 시공간에서 이론가 자신, 그리고 이론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구성적’ 역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혹은 반성이라고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이론적 “성찰”의 궁극적 목적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득권과 패권적 질서에 대한 도전이자 새로운 질서에 대한 모색임
- 비판이론은, “성찰”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는 물질적 역량으로서 이

해되는 권력의 문제 즉, 권력의 불균형, 지배와 피지배, 불평등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해소될 수 없다고 봄. 궁극적으로는 “성찰”을 통해 국제사회의 현 질서에 내포된 억압성, 차별성, 배타성을 들춰내고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율성, 개방성, 공동체성을 확장시키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음(Shapcott 2010)

3. 비판이론의 실천적 공헌과 함의: 한국외교정책에 관한 시사점

- 비판이론의 유용성은 국제정치와 외교정책 ‘실행’의 차원에서도 확인될 수 있으며, 특히 한국적 맥락에서 매우 큰 함의를 갖고 있음. 즉, 이론의 궁극적인 목표는 질서 ‘내부’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지 않고 억압적 질서의 ‘변형’에 있으며 이론가와 이론은 그 질서 형성의 일부뿐이기 때문에 그것을 변형하기 위해서 이론적 “성찰”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는 비판이론의 논리는 한국외교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 21세기 한국의 외교정책에 관한 가장 활발한 논의 혹은 논쟁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질문일 것임: ‘미-중 간의 세력 경쟁에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이른바 “전략적 딜레마”로 흔히 표현되는 이 질문은 수많은 언론기사, 정책제안서, 그리고 학술논문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는 질문이기도 함

가. “전략적 딜레마”의 비판이론적 ‘해체’와 ‘재구성’

- 이 질문이 비판이론의 인식론과 존재론을 거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해체’될 수 있음
- 우선, 질문은 무정부적 국제정치체제 속에서 미-중 간의 경쟁 및 대결을 그저 ‘주어진’ 현실로, 나아가 변형 불가능한 구도나 질서로 받아들이고 있음. 그리고 그렇게 고정된 질서 ‘내부’에서 국가행위자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혹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가)를 묻는 형식임
- 이렇게 구성된 질문에서 행위자의 역할은 ‘이미’ 상당히 제약되며, 따라서 선택의 범위도 매우 협소해질 수밖에 없음
- 주지하다시피, 한미동맹 강화, 친중외교, 그리고 이른바 “연미화중(聯美和中)” 전략과 같이 셋으로 구분되는 정책방향이 한국외교 관련하여

*미-중 간의
세력경쟁에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하는가?
이른바
“전략적 딜레마”.
그렇게 고정된 질서
‘내부’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동북아시아의**지역질서는 늘****고정되어 변형된 적이****없는가?”****동북아시아의****현 (대결적) 질서는****바람직한 것인가?****그 질서는 시공간을****넘어 ‘주어진’****것인가. 한국이****동북아시아 질서****‘내부’에서 도출된****정책 중에 하나를****선택할 것이 아니라,****그러한 질서가****‘구성된’ 사회적****조건의 파악을 주문**

현재 진행 중인 논의의 거의 전부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여기서 ‘해체’된 질문 속으로 다시 들어가 비판이론의 시각으로 그 질문을 다음과 같이 ‘재구성’해 볼 수 있음
- “동북아시아의 지역질서는 늘 고정되어 변형된 적이 없는가?” 동북아시아의 현 (대결적) 질서는 바람직한 것인가? 그 질서는 시공간을 넘어 ‘주어진’ 것인가, 아니면 (한국을 포함한) 행위자들이 물리적, 담론적 차원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역사적으로 ‘구성된’ 것인가? 그 질서를 형성하는 혹은 그 질서를 수용하는 행위자는 국가로 국한되어 있는 것인가? 이론가는 그 질서의 유지와 재생산의 과정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
- 비판이론을 통해 재구성되는 이와 같은 ‘성찰적’ 질문들은 현 질서가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게 하여 질서의 변형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음. 나아가 질서 ‘형성’의 한 행위자로서 한국이 주체적이며 동시에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자각하게 하고, 다양한 행위자들과의 연대를 모색하며, 더불어 담론적 그리고 실천적 성찰을 촉발하게 함
- 비판이론가들은 한국이 동북아시아 질서 ‘내부’에서 도출된 미국 중심 또는 중국 중심 정책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그 대결적 질서의 ‘변형’을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 무엇보다 우선 그러한 질서가 ‘구성된’ 사회적 조건의 파악을 주문하면서 언어 및 지식의 구성적 기능에 주목할 것임
- 앞서 서술했듯이, 비판이론에 따르면 이론 및 이론가는 현실의 중요한 구성단위임. 따라서 현 질서가 ‘대결적’이라면 대결적 언어, 이와 관련된 이론과 지식이 생산되고, 이것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수용되고 확산되면서 재생산되고 강화되면서 대결적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비판이론의 시각으로 보자면 여기서 한국의 외교적 목표는 이 구성의 연결고리를 끊거나 연결의 출발점을 전환하는 것이어야 함
- 평등, 자유, 평화, 개방, 공동체, 전 지구주의 등과 깊게 연관된 언어와 지식, 담론의 생산 및 확산이 중요해짐

나. 비판이론적 “성찰”을 통한 ‘담론적 제약’의 해방과 새로운 질서의 모색

- 바로 이 지점에서 비판이론이 강조했던 “지식권력(knowledge-power)”과 “성찰”의 문제를 ‘실천적’으로 접목할 필요가 있음
- “미-중 간의 세력경쟁에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수많은 언론보도, 정책브리핑, 학술논문과 저서, 나아가 대중강연과 교내강의를 통해 ‘재생산’되면서 단순한 질문을 넘어 인식과 존재를 제약하는 강력한 ‘실재(real)’가 되어 결과적으로 한국외교의 실행 범위를 협소하게 가둬두고 있음
- 한국의 물질적 역량의 한계, 지정학적 위치와 조건을 경시해서는 아니 되며, 물질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관념이 중요함
- 더욱 중요하게는, 물질적 차원에서 주어진 제약을 변형할 수 없다면, 최소한 관념적 차원에서 형성된 ‘담론적 제약’에서는 “해방”될 수 있으며 또한 그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 여기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새로운 질문’의 도출임. 즉, 현 질서의 ‘내부’에서 만들어진 질문에 잘 대응하는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밖’에서 새로운 질문을 도출하고, 그 질문을 추동하는 지식을 생산 및 확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앞서 논의한 비판이론의 “성찰” 개념은 바로 이 지점에서 수행적으로 접목될 수 있음. 외교관으로서, 학자로서, 언론인으로서, 즉 외교의 현실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성’하는 행위자로서 나의 언어·질문·의제(agenda)가, 현재의 대결적·패권적·차별적·배타적 질서 ‘내부’에 편입되어 그 내부의 문제에만 천착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그 결과 현 질서의 재생산, 나아가 그것의 강화에 공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성찰”할 필요 있음
- 이와 같은 성찰이 지속되면, 기존의 질서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밖’을 향하고 있는 비판적 언어와 지식의 생산이 가능해지고, 이는 결국 대안적 담론의 형성으로 이어져서 다시 한 번 행위자의 성찰을 유도하게 됨. 이러한 상호작용과정의 지속은 대안적인 사회규범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단초가 되어 결과적으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질서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새로운 질문’의
도출. 외교관으로서,
학자로서,
언론인으로서, 나의
언어·질문·의제가,
현재의 대결적·
패권적·차별적·
배타적 질서
‘내부’에 편입되어
그 내부의 문제에만
천착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 할
필요가 있음*

다른 여러 행위자와의
넓은 연대가 필수적.
새롭게 추구하는
질서는 특정한 나라에
국한된 이익이 아닌
전 지구적, 보편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설정되어야...
‘열린’ 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한
외교전략을 수립

- 비판이론적 시각에서 보자면, 새로운 질서의 모색과 그것을 위한 비판적 “성찰”이 한국외교의 목표 및 실행의 주된 대상으로 설정되어야 하는 것임

다. 새로운 질서 형성에 관한 비판이론적 제언: “성찰”의 ‘보편적’ 실천

- 비판이론을 통한 행위자의 “성찰”과 대안적 실천이 현 질서에 균열을 내고 새로운 질서의 형성으로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 행위자의 ‘물질적’ 역량을 무시할 수 없음
- 물질적 역량은 담론의 형성과 더불어 특히 그것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이뤄내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기도 함. 이런 점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나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상대적 힘의 열세는 한국이 비판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제약이 되는 요인임
- 이러한 ‘물질적’ 제약을 극복하거나 혹은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와의 넓은 연대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새롭게 추구하는 질서는 특정한 나라에 국한된 이익이 아닌 전 지구적·보편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임
- 한국은 미-중 간 대결적 질서구도 ‘내부’에서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넘어 ‘열린’ 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한 외교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할 것임
- 이런 맥락에서, ‘미-중 간의 세력경쟁에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 ‘속’에서 제시되는 한미동맹, 친중외교, “연미화중”에 관한 논의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중견국 외교’와 관련된 담론 역시 비판적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음
- 중견국 외교는 “동류의식(like-mindedness)”을 가진 국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자적 접근에 기반을 두어 틈새외교, 중재외교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함
- 비판이론의 시각에서 볼 때, 중견국 외교의 ‘목적’이 자국의 부족한 외교적 역량을 보완하고 궁극적으로는 자국의 국익을 확대하는 것에 있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한 부분임
- 관련된 “공공외교” 역시 타국의 대중에 우호적인 이미지를 형성하여

“자국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김우상 2013). 즉 주어진 질서 ‘내’에서, 혹은 현상유지를 전제로 중견국인 ‘자국’의 부족한 국력의 보완과 이익의 확대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음(Robert 2007)

- 이는 물질적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국가가 단기적으로 취할 수 있는 유용한 외교수단이 될 수는 있겠으나, 궁극적으로는 한 나라의 ‘국익’ 증진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질서형성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접근법임
- 한국이 겪고 있는 이른바 “전략적 딜레마”는 기존의 경쟁적 질서가 ‘변형’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외교적 수단(방법)을 선택해도 ‘근원적’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임: 딜레마의 형태/형식은 바뀔 수 있겠으나, 딜레마 ‘자체’는 질서가 변형되지 않는 한 해소될 수 없음
- 평화, 개방, 평등, 자유가 중심이 되는 ‘공동체적’ 질서가 새롭게 형성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외교는, 역설적이게도 자국의 이익증대를 위한 외교보다는 인류 보편적 공동의 이익을 위한 외교를 실행해야 할 것임
- 외교가 자국 정부나 민족 중심으로 실행될 경우 배타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고 이는 현재의 대결적 질서의 고착화에 일조하는 것이 됨
- 새로운 (공동체적) 질서의 모색은 보편성을 담보할 때 비로소 구현될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성찰”의 ‘보편적’ 실천이 매우 중요해짐
-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중견국 외교행위는 미-중 사이의 갈등이나 오인의 해소를 위한 이른바 “조정자” 혹은 “협력 유도자”의 역할 수행을 ‘시작점’으로 하되, 그것을 ‘종착점’으로 설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즉, 현 동북아시아의 대결이나 경쟁이 물리적 충돌로 점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현안으로써 필수적인 작업이겠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비판이론적 시각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한국외교는 ‘열린 공동체’ 건설을 아시아 지역에서 우선 추구하고 이를 발판으로 하여 타 지역과의 수평적 연대를 모색할 필요 있음
- 이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은 바로 한 반도의 평화통일 이슈임

**“공공외교” 역시…
궁극적으로는
한 나라의 ‘국익’
증진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질서형성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접근.
한국의 중견국
외교행위는 미-중
사이의 갈등이나
오인의 해소를 위한
“조정자” 혹은
“협력 유도자”의
역할수행을
‘시작점’으로 하되,
그것을 ‘종착점’으로
설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은 바로 한반도의 평화통일 이슈임. 평화, 평등, 자유가 중심이 되는 아시아의 열린 공동체 건설을 통해 새로운 질서형성을 모색. 한국의 통일담론에서 흡수통일 논리는 물론이거니와 경제적 관점에서 통일의 타당성을 주창하는 논의 역시 지양해야할 대상임

- 한국의 ‘부족한’ 물질적 역량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한국이 주도적이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며, 나아가 기존의 대결적 동아시아 질서를 평화적으로 ‘변형’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출발점이 되는 곳이기도 함
- 평화, 평등, 자유가 중심이 되는 아시아의 열린 공동체 건설을 통해 새로운 질서형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한국 ‘외교’가 우선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바로 한반도의 평화 ‘통일’ 문제이며, 이러한 차원에서 외교부, 통일부, 교육부의 제도적 공조와 연대는 매우 중요함
- 한반도 평화통일의 목적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 지구적 차원에서 평화와 공동의 이익에 잘 조응해야 할 것임. 따라서 한국외교의 실행자와 연구자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전 지구적 차원의 평등과 평화, 자유 증진에 실질적 공헌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하는 언어와 담론, 지식의 생산을 위한 작업도 병행해야 할 것임. 이런 차원에서 볼 때, 현재 한국의 통일담론에서 흡수통일 논리는 물론이거니와 경제적 관점에서 통일의 타당성을 주창하는 논의 역시 지양해야할 대상임
- 한반도의 통일 문제는 통일이나 민족의 문제가 아닌 외교 및 보편적 문제로 인식되어야함. 마찬가지로, 지식과 담론의 문제를 국내적 차원에서의 교육과 문화의 문제가 아닌 외교의 영역으로 적극 끌어들이길 필요가 있음

4. 맺음말

- 냉전 ‘종식’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의 냉전적, 대결적 구도는 지속되고 있음. 박인휘의 말을 빌려 말하자면, 냉전 시기의 대결적 구도가 “주어진 것”이라면 한반도의 탈냉전적 대결적 구도는 “선택한” 것임(박인휘 2015)
- 선택적 측면이 존재하는 현재의 대결적 질서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 외교는 그 무엇보다 먼저 이른바 “전략적 딜레마”로 표현되는 ‘담론적 제약’에서 벗어날 필요 있음. 김기정은 최근 논의에서, 냉전 시기는 물론이거니와 냉전이 종식되고 세계화, 산업화, 민주화가 이뤄진 현 시점에서 한국 외교가 “생존담론에 지나치게 압도당해왔다.”고 평가함(김기정 2015)
- ‘담론적 제약’은 단순히 언어적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지

적했하였듯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재생산 및 확산되면서 ‘실재’의 차원에서 한국 외교의 실행적 범위를 협소하게 가둬두고 있음. 이러한 제약에서 해방되기 위해 우리의 외교적 고민은 기존의 질서 내부에서 형성된 질문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질서유지형 즉 “문제풀이형” 질문을 비판적으로 ‘해체’하고 ‘재구성’하여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야 함.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외교정책의 실행자와 연구자 자신의 구성적 역할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동반되어야 함

- 궁극적으로 그동안 한국외교를 ‘규율’했던 담론적 제약에서 벗어나 이른바 “전략적 딜레마”를 근원적으로 극복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음

**“전략적 딜레마”로
표현되는 ‘담론적
제약’에서 벗어나
필요가 있음.
질서유지형 질문을
비판적으로
‘해체’ 하고
‘재구성’ 하여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야 함**

주석

- 1) 비판이론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본고의 참고문헌에 적시된 문헌들을 참조하거나 본인의 줄고 “왜 메타이론(metatheory)인가?: IR에서 메타이론적 논쟁과 이해의 유용성”을 참고할 것. 여기서는 지면의 제약으로 비판이론에 관한 개괄적인 검토만을 진행하고자 함. 더불어 본고의 주된 목적은 비판이론의 ‘실행적’ 함의를 파악하는 것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3절 “비판이론의 실천적 공헌과 함의: 한국외교정책에 관한 시사점”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자 함.
- 2) 물론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가 ‘계몽의 변증법’과 ‘문화산업’에 대한 깊은 논의를 통해 비판이론에 상당한 공헌을 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후술하듯 본고에서는 언어 및 담론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기에, 여기서는 “의사소통행위론”을 발전시키면서 비판이론의 이른바 ‘언어적 전환’을 일으킨 하버마스에 주목하고자 함.
- 3) 나아가 하버마스를 비롯한 프랑크푸르트학파는 권력불균형, 왜곡, 그리고 은폐와 같은 문제를 유발하는 구조적 원인을 이념(ideology)과 지식담론에서 찾고 이를 권력의 문제와 연결하여 비판하는 입장을 취했음. 이는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자들과 구별되는 것으로써 프랑크푸르트학파는 노동자의 계급투쟁에 의한 사회변혁이 아니라 지식인(연구자)의 비판과 성찰운동을 통한 불평등의 해방을 추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대한 좀 더 깊은 논의는 다음을 참조 할 것: Stirk(2005), pp.29-30, pp.33-34.

참고문헌

- 김기정. “대북정책의 진화.” “한반도 분단 70년의 원인과 과제, 한국정치학회 특별 학술회의,” 2015년 6월 17일.
- 김우상. “대한민국의 중견국 공공외교.” 『정치정보연구』 제16권 제1호. 2013. pp.331-350.
- 박인휘. “새로운 통일정책의 모색.” “한반도 분단 70년의 원인과 과제, 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 2015년 6월 17일, 발표문.
- Emmanuel Adler. “Seizing the middle ground: Constructivism in world politic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3-3(1997). p.333.
- Inanna Hamati-Ataya. “Transcending objectivism, subjectivism, and the knowledge in-between: the subject in/of ‘strong reflexivity.’”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40(2014). pp.153-175.
- Kimberly Hutchings. *International Political Theory: Rethinking Ethics in a Global Era*. Sage Publications, 1999. p.69.
- Mark Neufeld. *The Restructuring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p.108.
- Patrick Jackson. *The Conduct of Inquiry in International Relations: Philosophy of Science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Study of World Politics*. London: Routledge, 2011. p.160.
- Peter Stirk. *Critical Theory, Politics and Society: An Introduction*. London: Pinter, 2000. pp.16-25.
- Richard Devetak. “Critical Theory.” In Scott Burchill, et al.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Palgrave, 2005. pp.137-138.
- Richard K. Ashley. “Political Realism and Human Interest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25-2(1981). p.207.
- Richard Shapcott. *International Ethics: A Critical Introduction*. London: Polity Press, 2010.
- Robert O. Keohane.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p.63.
- Robert W. Cox. “Social Forces, States and World Orders: Beyo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10-2(1981). p.128.
- _____. “The International’ in Evolution.”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35-3(2007). p.513.
- Robert W. Cox and Timothy J. Sinclair. *Approaches to World Ord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p.138.
- Ted Hopf. “The promise of constructivism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ternational Security* 23-1(1998). p.183.

❖ 저자 약력

■ 은용수

現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주요 연구분야는 IR 이론, 외교정책분석론 (FPA), 사회과학철학(존재론, 인식론, 방법론), 동아시아 국제관계이며, IR 이론, 정치 심리학, 사회과학연구방법론을 논하는 연구논문이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PS: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Political Studies Review*,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등에 게재된 바 있으며, 국제위기 및 지역주의에 관한 저서가 Palgrave Macmillan에서 출판된 바 있음. 현재 진행 중인 연구는 IR 이론의 다원화와 파편화, 동아시아 안보 연구방법, 과학적 실재론과 IR 등이 있음. ysir@hanyang.ac.kr

기획 및 감수: 도종윤 (제주평화연구원 지역통합연구부장)

편집: 고정선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강윤미 (제주평화연구원 연구보조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97-858)

전화: 064) 735-6500 팩스: 064) 738-655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